



‘지속가능발전’으로 가는 길
우리나라 환경성과의 위상 제고
 2008 환경성과지수(EPI) 속 우리나라의 위상을 중심으로



이 윤 섭 환경부 전략총괄과장
 ☎ 02-2110-6670 ys007@me.go.kr

〈필자약력〉

- 한양대 토목공학, 한양대 공학 석사
- 환경부 수도관리과장, UNEP 파견, 낙동강유역청 환경관리국장, 유해물질과장

경제발전·환경보전·사회적 형평성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현재 세계적 화두이자 시대적 과제로, 세계 선진 각국은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앞다투어 채택하고 있다. UN과 OECD는 2002년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수립·이행을 합의한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NSDS,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ies)을 기후변화대응, 빈곤퇴치 등 세계 현안 대응에 핵심 도구로 활용하도록 권고·지원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이 국제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한 것은, 경제 수준이 일정 수준에 오른 세계 여러 국가들이 개발 위주의 성장 전략에 따른 심각한 환경 문제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음을 깨달은 것에서 기인한다.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지구 온난화, 자원고갈 등은 전지구적 갈등을 빚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른바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나라 또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과연 지속가능발전의 키워드인 ‘환경과 경제의 상생’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잘 자리 잡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이에 근접해 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을 각국의 환경 상황을 알려주는 지수인 ‘환경성과지수(EPI)’를 통해 찾아보기로 한다.

지난 2008년 1월 23일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세계 각국의 환경성과지수(EPI) 순위를 발표하였고, 우리나라는 149개국 중 51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세계 13위(2006년 명목 GDP 기준)임을 생각할 때, 상당히 초라한 성적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2006년 평가시의 순위(133개국 중 42위)보다 9계단이 하락하였다는 것에 여론의 반응이 다소 냉랭한 편이다.

사실 국제 순위의 소폭 변동에 일희일비할 일은 아니다. 따지고 보면 EPI 순위가 우리나라의 환경 수준을 전적으로 대변한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개별국가 제공 자료가 아닌, 국제기관 또는 대학연구소 등에서 발표한 자료가 평가에 적용됨으로써, 실제 우리나라의 환경 상황과는 괴리된 평가결과가 나오는 항목들이 존재한다. 2008 EPI의 경우, SO₂(이산화황) 배출량이 우리나라 공식통계에 나타난 실제 배출량보다 약 9배나 많게 선정되어 최하위 순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불리한 평가방법론의 선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환경 수준의 평가 절하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에 비해 환경 분야의 발전이 뒤떨어져 있으며 그만큼 향후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기에, EPI 평가가 제공하는 우리나라 환경 분야의 입지에 대해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EPI 평가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가져다준 것은, 산업화 시대의 경제발전 최우선정책과 에너지 과소비형 경제구조로 인한 정부 정책의 한계 때문이다. 물론 그간 우리나라에서도 환경기초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 4대강 특별대책 추진 등 환경분야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기에, 하수설비, 수질 등 일부 좋은 평가를 얻은 부문도 있다. 그러나 수도권 미세먼지 및 오존농도, 생태계 보호, 온실가스배출 등은 하위권에 속하여, 지난날 성장위주의 전략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아도 우리나라 순위는 30개국 중 26번째이다.

이쯤 되면 지금의 취약한 상황에 대하여, 환경파괴가 선진국이 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초래되는 문제라는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환경을 도외시하는 국가는 선진국이 될 수도, 지속가능발전을 이룰 수도 없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환경성과 향상에 온 힘을 다하여야 할 때이다.

정부에서는 환경부 주관으로 2012년까지 EPI 순위 30위권 진입을 목표로, 환경성과지수(EPI) 제고대책을 2008년 5월 중으로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EPI 제고 대책은 환경 관련 범부처 합동대책으로서, 환경부·지식

경제부·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동 추진한다. 이는 수도권대기질 개선·야생동식물 보호 등 고유한 환경분야 뿐 아니라, 에너지소비·농약사용 등 환경에 영향을 주는 연관분야의 정책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균형있고 효과적인 대책이 되도록 설계중이다.

2008 EPI 평가에서 취약한 평가를 받은 부문은 이 대책에 따라 중점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전국민에 대한 위생적 상수도 공급, 도시 미세먼지 저감, 오존농도 감소를 위한 대책을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환경보건 수준 향상에 힘쓸 것이다. 또한 멸종위기종 보호 및 야생동식물 서식지 보호, 농업으로 인한 토양오염 및 야생동식물 피해 방지, 치어남획 등에 따른 해양생태계 파괴 방지 등 생태계 보호를 위한 제반 대책을 추진하고, 현재 전세계적 이슈인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을 위한 대책도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환경 수준이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현 평가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체방법론을 제시한다거나 실제 우리나라의 수준을 반영한 적정 통계가 평가에 적용되도록 국제통계를 확인·정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사회 전 분야에서 진정한 지속가능발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EPI 제고대책을 넘어서서, 경제·사회분야 제반 정책과의 조화와 균형, 그리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확고한 인식과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자원과 환경 위기의 시대를 맞아 자원이용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인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선진국들은 이미 앞선 환경기술을 무기삼아 환경규제를 강화하면서 세계시장을 자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해 나가고 있는 이 때에, 세계 13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결코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할 수 없다. 국가 환경 보전을 위한 정부와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전 세계의 여정에 우리나라가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